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백승중
한국기독교교육대학교 대우교수

조선왕조와 고려왕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미국의 한국사가 존 B. 단컨이 대표적이다. 그는 조선 초기 지배층의 대부분이 고려의 유(舊) 귀족 출신이었고, 두 왕조 사회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평범한 집안에서 많이 나왔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도전’ (鄭道傳)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의 외가와 처가는 노비였다. 그런데도 정도전은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평민중심, 특히 소농중심의 유교사회를 꿈꿨다. 조선은 고려와는 엄연히 구별

경제민주화, 정도전의 꿈

되는 새 세상이었다. 정도전의 개혁구상이 모두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후대에 그의 이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민본정치로 이른바 세종 역시 정도전의 사상적 후계자였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정도전의 사상적 출발점이었다. 그 당시 경제의 중심은 농업이었다.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논밭을 다 뺏아 빼앗았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한 조각의 땅에도 임자가 여럿이었다. 농민이 부담할 소작료 역시 2중 3중이었고, 세금의 운반비용도 무거웠다.

지주의 심부름꾼을 접대하는 비용도 많았다. 그러나 고려의 지배층은 농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임금의 할 일이다.”(논어)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한 정도전과는 달랐다.

‘정도전, 삼봉집(三峰集)’에는 “공(정도전)은 그 폐단을 잘 알고,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태조(이성계)를 적극 도왔다. 국내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만든 다음,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해 옛날의 율바른 토지제도를 회복할 생각이었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성계(李

成桂)가 자신의 견해를 인정하자, 토지 개혁안을 재상회의에 제출했다(1389).

당시 귀족들은 머리로는 토지개혁안을 이해했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했다. 정도전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인 이색조차 그러했다. 학자들 중에서는 조준과 윤소종만이 개혁에 찬성했다. 결국 개혁안은 세에 밀려 좌초됐다.

보통사람은 사회적 약점 때문에 보수적이 되기가 쉽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도 농민군은 진압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대개 양반의 서자나 아전으로서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득권층에 온전히 편입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출신을 배반하였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다. 자신의 한미한 출신을 끝내 잊지 않았던 그는, 정치의 근본을 백성의 삶에 두었다. 그는 지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과거제와 무상교육 등 각종 개혁안을 마련했다. 기회 균등한 새 사회의 건설을 통해 다수에게 행복을 선사하고자 했다. 공리주의자라고도 불릴만한 정도전이 ‘왕자의 난(1398)’을 만나, 쓰러지고 만 것은 유감이었다.

평평거리리는 오늘날의 기득권층도 정도전의 뜻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1960년

대부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다. 국가는 대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었고, 시민들은 희생을 감내하였다. 현재의 무역대국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자살률이 유난히 높는데, 그들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부자증세를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온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2013년 5월, 나는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한 그 나라의 고위성직자가 물질적 ‘재분배’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 다시 이러한 양심의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정도전의 ‘경자유전’이란 주장 자체는 이미 낡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새롭다. 소수의 부자들이 국토와 자본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구 차원에서야 마찬가지다. 2011년 가을, 뉴욕 월가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전 세계 거대자본에 맞서 ‘오쿠파이’ 운동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정도전이 추구하던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社說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증가 방치할 건가

광주시의 복지분야 예산 부담률이 향후 3년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열악한 재정 탓에 현안사업 추진마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복지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지역의 살림살이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2017년 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광주의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39.0%로 예측됐다. 실제 2013년 1조 1966억 원이던 광주시의 복지예산은 2017년 1조3948억 원으로, 19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4년 광주시 복지예산이 1924억 원으로 총예산 중 15.5%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광주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 복지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 원에서 2017년 71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광주시가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만 해도 2015년 434억 원, 2016년 936억 원, 2017년 1765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자체의 복지부담 증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된 감세정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보험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영향이 크다.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국가와 지방간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것처럼 지방 소비세를 확대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남 수산물 친환경 인증 높여야 미래 있다

‘수산 1번지’인 전남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장려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수산물과 일반 수산물 간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인증기준, 체계 등에 대해 어민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수산물 생산은 2011년 1만 602t, 2012년 1만8002t 등 적은 양이나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전국 친환경 수산물 생산량 2만3347t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인증면적도 김 2788ha, 미역 391ha, 굴 33ha 등 3212ha로 전국 3237ha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남도가 나서는 한편 일반 수산물과의 가격 차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어민들 역시 인증을 외면하게 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선 안 될 것이다.

다라도 일반 수산물과 가격차가 나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복잡한 인증 절차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또한 인증기준과 체계 등이 최근에 마련되면서 어민들의 인식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하도급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친환경이 대체로 굳어진 마당에 수산물만 친환경이 아니라면 향후 판매를 보기 힘들다. 김을 보더라도 염산을 살포해 소비자들이부터 불신을 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전남도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대한 어업인 교육과 홍보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일반 수산물과의 가격 차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어민들 역시 인증을 외면하게 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선 안 될 것이다.

의료칼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기대하며



김수관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수많은 기업과 대학들이 탁월한 연구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뼈 이식재 등 우수한 치과 제품들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치과 산업은 다양한 의료 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면에서 타분야에 비해 월등하다. 타지역에 비해 치과 관련 대학과 연구 인력이 풍부한 광주지역이 치과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광주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되면 원전 기술

확보와 응용기술 개발이 용이하고, 만일 상용화를 이룰 경우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연결개발(C&D, connect & development) 및 체계적인 인력 배출을 통해 종합 산·학·연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면 치과 의료산업의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국가 신성장동력(신성장 창출)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치과관련 기업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모든 제품의 기초는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므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연구개발이 되어야 하며, 산업과의 융복합 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 산업과의 융복합 연구 체계가 확립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도 접목시킬 수 있다. 또한 창업 유도도 필요할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바람직한 형태 및 구조는 창의, 융합, 공동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연구원의 임직 선택은 기존에 이미 갖추어진 치과산업의 집적화, 대학의 체계적인 연구 인력양성, 치과 임상시험센터의 설치 및 운용 현황,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광주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유치돼야 하는 이유는 치과산업 단지, 소계 부품의 활성화 등 충분한 인프라 조성, 유관 연구부서, 체계적이고 풍부한 연구인력 양성이 가능한 대학(인프라), 지자체의 지역 경제 발전 정책 방향 즉 지원과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중앙의 지원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광주가 먼저 기반을 조성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시민의 건강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온 광주 광주시는 3연속 전국 건강 도시 1위에 선정되었다. 광주시는 덴탈 메카, 치과산업의 메카, 아시아 덴탈시티로 커가는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네

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 관련 부서의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하고, 체계적인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도시 경쟁력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인구 5만5000명인 헝가리 서부부소도시 소프론은 임플란트 산업이 전체 산업의 10%를 차지하고, 매년 치과치료를 위해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이 곳을 다녀가는 등의 관광광이 현실화돼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되면 수많은 인증기관의 부속 기관 및 연구소가 설립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관련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할 것이다. 결국 광주는 치과산업의 아시아 거점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중국 시장 등과 접근성이 좋아 의료관광(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고용(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전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감동을 이어가려면



한희원
서양화가

요즘 광주에서 가장 많이 회자 되고 있는 단어가 ‘아시아’라는 단어일 것이다. 아마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때문인 것 같다.

세계유지 면적의 30%를 차지하며 거대한 산맥과 다양한 풍습, 인종이 모여있고 가장 영향력있는 종교의 발생지인 아시아는 영혼의 대륙이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면이 깊은 지역이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어떤 때는 정치적 협력과 문화적 동반자로서 어느 시기에는 갈등과 적대적 관계로 애증이 접합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현재에 와서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여러 정황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어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교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에서 가장 문화예술의 전통이 깊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의 교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이 만나 광주·취안저우·요코하마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한 후 올해 2월13일과 25일에 취안저우와 요코하마에서 잇따라 개막공연이 열렸다. 그리고 지난 18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도 ‘동아시아 문화의 빛 광주’라는 주제로 광주개막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중국 류젠성의 취안저우는 항구도시로 중국 국무원이 선정한 24개 역사문화 도시중 한 곳이고 요코하마는 일본의 유수한 문화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도시인 광주가 문화를 통해 교류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시민들

도 함께 기대하는 공연이었다.

무대에 올려지는 공연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이 다른 예술이 한 무대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은 공연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상이한 문화가 한 무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으로 이끄는 것은 그만큼 상호간의 예술의 이해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출기법이 필요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의 개막공연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여러 장르의 독창적인 예술을 통합하여 보여준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한·중·일 각 도시의 예술은 서로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역사속에서 문화적 교류로 인하여 동양정신이라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

이러한 것을 전통과 현대 음악·춤·미디어 아트와 대규모의 합창팀이 아우러져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인 건 교류의 첫 서막을 올리는 축제의 정신과 잘 맞은 흐름이었다.

일본의 전통악기와 광주의 김기중의 대

금소리는 다르면서도 묘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브레시티 무용단과 노름마치와 관소리, 얼썩의 타악기는 현대무용과 사물놀이 관소리라는 이질적인 요소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시도였다. 3부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합창단의 공연은 이제까지 광주 무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250명의 대규모 합창단의 공연으로 중국 일본의 곡과 광주의 김현옥 작곡가의 ‘광주의 빛’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이남의 영상은 새로운 무대미술을 보여줌으로서 전체적인 서사와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러한 교류 공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임으로 앞으로의 공연을 통하여 광주의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제간의 교류를 통해 뛰어난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완성하는 뛰어난 기획자를 키워내야 할것이다. 이러한 도시간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가 꽃 피는 광주의 길을 기대한다.

無 等 鼓

최근 우리나라의 ‘스타노믹스’가 주목받고 있다. 김연아·이상화 등 스포츠 스타와 전지현·김수현 등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주역들이 스타노믹스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스타 한 명이 만인(萬人)을 먹여 살리는 이른바 스타노믹스(스타들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다.

김연아가 지난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에서 분석한 경제적 효과는 무려 5조2350억원에 달했다. 소치대회를 회에서 김연아는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금메달 같은 은메달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는 밴쿠버동계올림픽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이상화는 광고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이상화의 광고료는 1년에 2억 원~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두 배 이상 광고료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천송이 효과’로 일컬어지는 전지현의 스타노믹스는 또 어떤가. 패션·메이

크립과 명품·액세서리 등 소비 금액(金脈)을 깨는 ‘완관녀’ 천송이 효과는 단순히 패션·메이크업 뿐 아니라 자동차·스마트폰 등 그녀가 사용한 모든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천송이와 달달하고 예뻐한 사람이야기를 펼쳤던 남자 주인공 김수현의 스타노믹스도 엄청나다. 그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1회 출연료로 5억 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중국 업체와 국내의 기업의 광고로 인해 금메달을 딴 후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에서 분석한 경제적 효과는 무려 5조2350억원에 달했다. 소치대회를 회에서 김연아는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금메달 같은 은메달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는 밴쿠버동계올림픽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이상화는 광고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이상화의 광고료는 1년에 2억 원~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두 배 이상 광고료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천송이 효과’로 일컬어지는 전지현의 스타노믹스는 또 어떤가. 패션·메이

스타노믹스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마 ‘별그대’는 중국에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신드롬으로써 반지면서 한류와 한류스타의 재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제품에 대한 폭발적 소비 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별그대 차이나노믹스’(별그대+차이나+이코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가 1면에 중국 배 이상 광고료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천송이 효과’로 일컬어지는 전지현의 스타노믹스는 또 어떤가. 패션·메이

농민들 보이스피싱 속지 않도록 예방교육 해야

정치적으로 한때 지역감정이 망국병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스 피싱이라는게 망국병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시 농촌 거릴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금융사기를 부리니 도시인들보다 잘 속는 순박한 농민들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얼마 전에는 고향에서 구제역 살처분 보

상금을 노려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협 직원이라고 속인 보이스 피싱 범인은 철저한 가족의 보상금과 생계 안정자금을 입금할 테니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친자식 이상으로 돌보던 가족이 차가운 땅속으로 매몰돼 슬픔을 견디지 못하던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악랄한 사기를

치는 행위는 정말 극형에 처해도 아깝지 않은 행위가 아닐수 없다.

농가에는 항상 이런 사기범들이 들끓고 있다. 농민기에 빈집을 골라 털던 습성은 경찰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 본다고 하지만 보이스 피싱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유형으로 전화가 걸지 모르니 그걸 막아내기도 참 쉽지 않다.

농촌 어르신들은 가까이에 학교가 없어서 멀리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사기

치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택배가 반송돼서 그런다며 택배를 다시 보낼려면 입금이 필요하니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황당한 사기수법도 있다.

농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예금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물으면 친자식이 아니면 무조건 알려줄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다. 전화로 은행계좌에 관해서 묻는 모든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도록 도시의 자녀들이 다시금 알려드렸으면 한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부 2200-66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F A X 2200-55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